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.10.12.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11.(화) 오전 11시에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10.11.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
담당과장	창의산업과장 최우석(044-203-4360) 철강화학과장 김종철(044-203-4280) 기업정책팀장 허정수(044-203-4830)	담 당 자	우성훈 서기관 (044-203-4362) 이재석 사무관 (044-203-4285) 윤영범 사무관 (044-203-4831)

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

- 철강 등 4건 사업재편계획 추가 신청 접수 및 10.18(화)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-

□ 지난 9.8.(목)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, **10.11.**(화)까지 **철강, 조선기자재, 섬유, 태양전지** 등 **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**했다.

○ 특히, 이번 신청에는 **강관업체**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, **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되어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.**

* **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강관분야 사업재편 방향** :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,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

□ 한편, 산업부는 **10.18.**(화) **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**를 열고 신청 기업들의 **사업재편계획을 심의**한다.

○ 이**번 심의위원회**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**사업재편계획서 접수 후 한 달 이내 열기로**한 것이다.

□ 기업활력법 시행(8.13일) 이후, **2달간의 추진현황**을 분석해 보면

○ **총 6개 업종에 8건*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·접수**되어, **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**(한화케미칼, 유니드, 동양물산기업 등)되었으며, **5건이 현재 검토 중**이다.

* (석유화학) 2건, (농기계) 1건, (철강) 1건, (조선기자재) 2건, (섬유) 1건, (태양전지) 1건

○ **사업재편의 형태**를 살펴보면,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, 부지, 설비 등 **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**이며, **인수·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.**

○ **기업규모**를 보면, **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**이라는 **당초 우려와 달리, 대기업이 2건, 중견기업이 3건,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**하여 **중소·중견기업이 75%**를 차지한다.

○ 신청 기업들은 ❶ 신사업 진출을 위한 **연구개발(R&D) 지원**, ❷ 과세이연 등 **세제지원**, ❸ 스마트공장 보급 등 **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**, ❹ 기업결합심사 및 상법상 **절차간소화 특례** 등을 주로 요청했다.

□ **향후 대기 중인 수요**를 살펴보면 철강·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**철강·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**되고 있으며, **실제 2~3개 기업들이 10월~11월 중 신청 의사**를 밝혀 왔다.

○ 그 밖에 **건설기자재, 섬유(의류), 전자부품, 제약**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**10~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**

□ 한편, **일본**이 '99년 이후『산업경쟁력강화법』등을 통해 **연평균 40여건**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것과 비교할 때, **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청·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**으로 평가된다.*

* 우리 경제규모의 3배인 일본의 연평균 승인건수가 4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, 기활법 시행 2개월만에 8건이 신청된 것은 일본에 비해 사업재편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 가능

□ 산업부는 **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**할 수 있도록 상법·공정거래법상 **절차간소화, 세제, 연구개발(R&D), 고용안정, 중소·중견 특별지원** 등을 망라한 **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**해 신청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.

○ 특히, 세제지원의 경우, 올해 세법 개정(안)에 포함한 **적격합병 요건 완화**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**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**하면, 사업재편시 **세제지원이 대폭 확대**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기활법 추가 세제지원 : ❶ 인수자금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%에서 70%로 완화, ❷ 중복자산 처분시 이를 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적격합병 취소요건 완화, ❸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허용

○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**규제**(입지·환경·노동 등)**를 적극 발굴**하여 **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**하는 등 **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**를 추진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(044-203-4831), 창의산업정책과 우성훈 서기관(4362), 철강화학과 이재석 사무관(4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